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 성 훈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이 2월 24일 인공위성 운반용 미사일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현재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담화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1998년 8월 31일 실험은 일부 성공을 거두었지만, 2006년 7월 4일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다. 1998년 실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 이전까지 정보당국과 과학기술계의 전반적인 의견은 북한의 기술수준이 중거리미사일인 '노동'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이고, 연료통을 교체하며 발사상태를 지속해야 하는 다단계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평가를 비롯듯이,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 2,000km 넘는 투사능력을 과시했다. 당시 북한은 대포동 1호가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평화적 목적의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광명성 1호' 위성이 우주궤도를 돌면서 음악을 보내오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광명성 1호가 궤도에 안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엇갈린 견해가 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대포동 1호 미사일은 발사 보름 전인 1998년 8월 중순 미 국방부 산하 린스펠드위원회가 발표한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린스펠드를 책임자로 한 이 위원회는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종을 울리면서 새로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6년 7월의 두 번째 실험은 발사 후 미사일 본체가 바로 파괴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에도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면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용이라고 포장했을 것이다.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했다.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유엔결의안 1695와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 이후 나온 유엔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활동(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관련 물질과 장비 및 기술을 반·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세 번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 평화적 목적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유엔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남 비방강도를 높여온 북한이 유엔의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부단속용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미사일이 갖는 전략적, 상징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대미·대남용이라는 분석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대외전략은 '남한 때리기'와 '미국 시선 끌기'를 두 축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미국 시선 끌기'의 측면이 강하지만, 남한사회를 흔들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보다 더 워싱턴의 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미사일 카드를 동원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북·미 직접대화의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다. 제1차 미사일 발사 후 1년이 지난 1999년 8월 북한이 다시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준비하자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했고, 그 결과 북·미 고위급회담이 1999년 9월 초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를 잠정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등 다양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이후 클린턴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미사일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남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대남전략에 일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NLL 혹은 DMZ 인근에서의 도발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 역시 남한사회에 큰 충격을 가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으로는 안된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정부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압박카드인 셈이다.

결국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남한에 대해 동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군사·기술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무기를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실험의 동기는 크다. 따라서 제3차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시점은 최고인민회의 선거일인 3월 8일에서부터 ‘키 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3월 9~20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 발사된다면 제3차 미사일 발사의 정치·전략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미사일 발사가 단순한 대미 시선 끌기 차원을 넘어서, 핵폐기의 조건으로 내세운 상호 핵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요구와 함께 정전체제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구조조정까지 염두에 둔 전략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해법이 있을까? 일부에서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요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우주궤도를 지나 미국의 영공에 근접해서 명백한 위협을 주지 않는 한 요격할 명분도 없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 평화적 목적이라며 발사하는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혹은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남한 정부가 특사를 그것도 초당적으로 대규모 특사단을 북한에 파견해서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지만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6·25 전쟁 직전에 김구선생이 김일성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남한의 특사는 거의 성공한 적이 없다. 1972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 방문과 같이, 북한정권의 이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특사파견이 성과를 냈었다. 현 시점에서의 특사파견은 실패할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현재 북한 정권의 ‘남한 때리기’ 전략을 감안한다면, 특사를 파견해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 자명하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것이다. 우선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준비가 계속될 경우, 대북 경고 결의안을 내고, 미사일 발사가 결행될 시 즉각 결의안 1695호와 1718호를 재가동할 수 있는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협조 하에 미국의 대북특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남한의 특사파견에는 흥미가 없어도 미국 특사에는 관심이 많을 것이다. 보스워스 특사의 파견은 정치·군사적인 문제



는 북·미간 협의사항이라는 북한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특사를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론을 어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불안해하는 국민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대남 군사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고 군사적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야 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는 일이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떠나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통합을 선도해야 할 시점이다.

